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삶의 행복과 세계의 미래를 잇는 국가전환과 실행체계

김미루
KDI

기획예산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세미나

2026년 9월 16일

2045 국가발전전략

성장의 힘을 삶의 행복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더 강한 성장 · 더 따뜻한 공동체 · 더 책임 있는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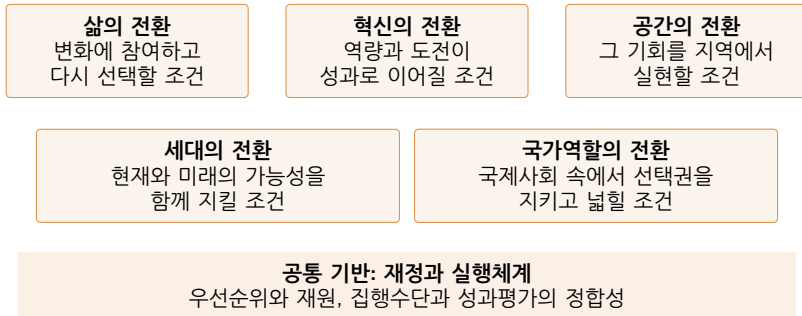
- 성장역량의 확충과 삶의 선택기회 확대를 함께 추진

-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의 성과를 일과 배움, 주거와 돌봄의 안정으로 연결
- 개인의 선택을 대신하기보다 출신배경과 첫 경로가 생애를 고정하지 않도록 지원

-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국제규칙과 공동해법의 설계로 확장

다섯 전환의 구분: 정책 분야보다 제도의 작동 조건

- 성장의 성과가 삶에 도달하고 지속되기 위해 함께 바뀌어야 할 조건을 구분



- 같은 정책도 개인의 생애, 생산, 공간, 시간, 대외관계에서 다른 제도와 결합

전환의 의미: 무엇을 기준으로 제도를 바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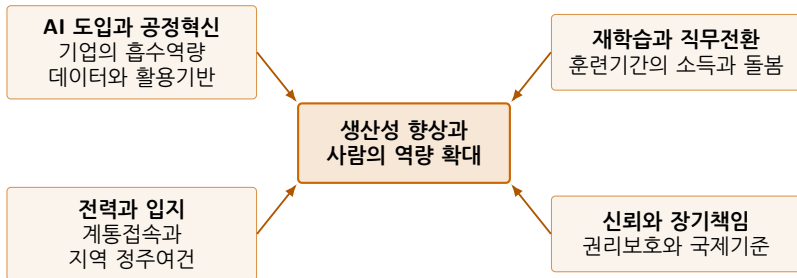
- 사업을 추가하는 데서 나아가 지원과 평가의 기준 자체를 전환

전환	기존 접근의 한계	바꾸려는 제도적 기준
삶	현재의 고용상태와 제도별 자격	생애경로에서의 역량과 위험 대응
혁신	연구 투입과 개별 기업의 사업화	현장 활용, 기업성장과 도전의 보상
공간	행정구역별 시설과 사업비 배분	경제권과 생활권의 성장 및 접근성
세대	현재 수요와 단기 수지에 대응	장기 제약과 세대별 비용 및 편익
국가역할	외부규칙에 대한 사후적 적응	회복력과 핵심성에 기반한 공동설계

- 삶과 혁신은 참여와 성과를, 공간과 세대는 확산과 지속을, 국가역할은 대외적 기반을 담당

왜 중요한가: 한 정책의 성과는 다른 제도에 의존

- 정책 간 보완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개별 사업의 확대가 최종성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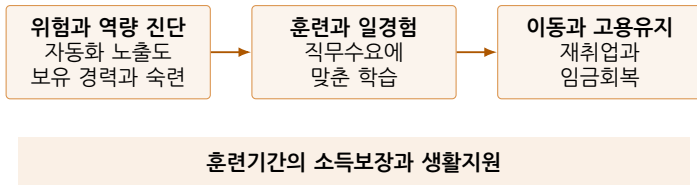


- (정책조합) 인프라와 인재, 소득지원과 규율을 선후관계에 맞추어 설계
- (자원배분) 서로 대체하기 어려운 제약을 확인하고 우선 투자할 과제를 선정

삶의 전환: 직무 이동과 위험분담을 함께 설계

- 현재의 일자리 유무를 넘어 일이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지원

- 사후적인 소득보장을 유지하면서 재직 중의 위험 진단과 재학습을 강화
- 사회복지의 디딤과 도움, 산업의 AI 전환지원,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결합



- (생애 고용안전망) 고용24 잡케어에 고용보험 자료와 훈련정보를 결합
- (성과기준) 이수인원보다 직무전환과 고용유지, 임금회복을 중시

소득기반 사회보장과 먼저 다가가는 복지

- 보호의 단위를 개별 일자리에서 개인의 소득흐름으로 전환

- (소득기반 고용보험) 국세자료로 복수소득을 합산하여 부과와 구직급여에 반영
- (다층 보장) 독립 실업부조와 참여소득, 기초생활보장의 역할을 구분
- (유인 정합성) 가입 유인을 고려한 급여 설계와 근로연령층의 반복적 소득공백에 대응

- 급여의 설계와 실제 이용 사이의 공백을 전달체계 개편으로 축소

- (선제적 발굴) 행정자료와 생애사건을 이용해 발굴과 안내, 신청 및 급여연계를 강화
- (권리보호) 인간의 최종판단과 이의제기, 편향감사와 대면경로를 병행

청년의 학습과 자산: 경력과 자립의 기반을 축적

- 청년을 미래의 인력에 앞서 현재 자기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인식

배움이 다음 경력으로

- 학점과 마이크로크리덴셜의 검증 및 상호인정
- 학습자 보호와 교육의 질, 성과의 투명성을 함께 관리

일의 성과가 자립기반으로

-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자산형성 지원을 생애단계에 따라 연계
- 저소득과 무소득 청년의 접근성 및 누진적 지원 강화
- 중도해지 관리와 만기 이후의 금융교육 및 자산관리 연결

- 교육의 기회와 그 선택을 감당할 생활기반을 함께 마련

혁신의 전환: 기술 잠재력과 실현 효율을 함께 제고

-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능력과 경제가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함께 강화

기술 잠재력 A
연구의 질과 인재
혁신자본과 전략기술

×

실현 효율 τ
시장진입과 현장확산
기업성장과 자원재배분

생산성 향상과 좋은 일자리, 기술의 사회적 편익

- (도전의 보상) 직무발명과 기술이전 수익배분, 장기 성과보상과 산학연 이동을 정비
- (전환의 연속성) 연구개발에서 사업화와 확산, 회수와 재투자까지 연결

연구개발: 연차별 산출에서 임무 누적성으로

- 연구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평가단위와 사업화 지원의 연속성을 개편

- (임무중심 연구개발) 전략분야의 미션 PMO에 예산조정과 성과책임을 결합
- (도전형 평가) 성실한 실패와 목표조정을 별도 트랙에서 다루고 프로그램의 누적성과를 평가
- (성과 이어달리기) 개념검증부터 시제품과 실증, 초기매출까지 연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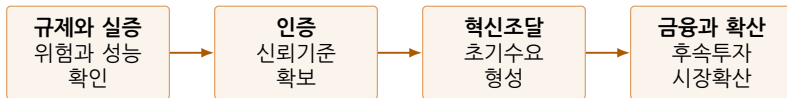


전담 사업화 매니저와 연속적인 시설 및 자금 지원

- 개별 과제의 완료와 실제 기술 및 시장의 진전을 구분

시장진입: 실증의 성과를 인증과 초기수요로 연결

- 임시적인 규제특례에서 멈추지 않고 검증된 기술의 정규 시장진입 경로를 정비



- (규제 정비) 규제샌드박스 법령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검증의 활용) 실증자료를 인증과 조달의 증빙으로 인정하고 AI 신뢰인증의 상호인정 확대
- (초기시장) 사전상업조달과 무형자산 평가, 민관 공동투자로 수요와 금융을 결합

기술확산: 공통 인프라와 기업의 흡수역량을 결합

-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가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구분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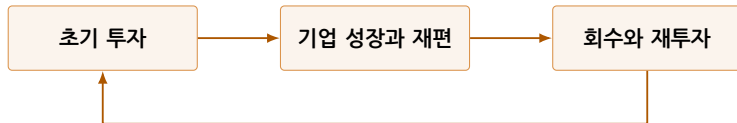
- (공통 기반) 국가 AI 컴퓨팅과 컴퓨팅 크레딧, 산업별 데이터스페이스 및 공통 표준 확충
- (현장 활용) 구독형 AI를 기업의 운영시스템과 로봇, 공정데이터에 연계
- (물적 조건) AI 수요와 저탄소 전력, 전력망 및 지역 입지계획을 함께 검토

- 인프라의 구축량보다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확인

- 장비와 솔루션, 인력과 현장지원으로 업종별 병목에 대응
- 기술산업혁신의 확산정책과 기후에너지의 공급안정성, 지역의 정주기반을 결합

기업성장: 규모별 보호에서 성장과 재편 지원으로

- 기업 내부의 생산성 개선과 기업 사이의 자원재배분을 함께 촉진
 - (성장 유인)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선
 - (노동자 보호) 사업재편과 재훈련, 직무전환 및 소득지원을 함께 검토



- 인수합병과 세컨더리 시장을 통해 초기투자자의 회수경로를 다변화
 - 회수는 기업의 종료가 아니라 투자자금의 유동화와 새로운 투자 가능성을 의미

서비스 혁신: 가격과 품질, 사람의 역할을 함께 조정

- 기술보급과 함께 숙련 및 서비스 품질에 투자할 보상체계를 정비

가격과 보상

- 돌봄과 보육의 수가 및 위탁단가에 실제 비용과 숙련 반영
- 품질기준과 인력의 숙련 축적을 뒷받침하는 유인구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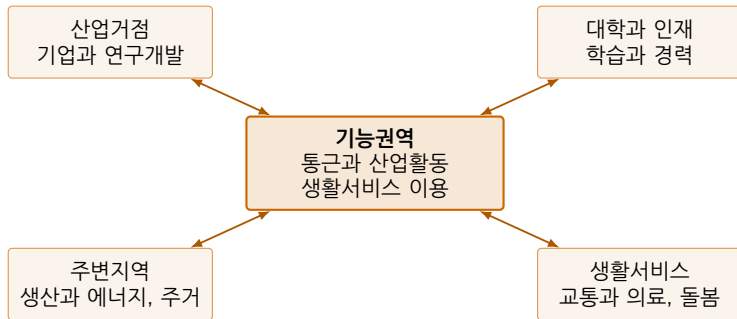
업무와 기술

- 기술적 수행가능성과 인간 관여의 사회적 필요성을 구분
- 핵심 대인과업과 최종판단은 사람에게 우선 배치

- (평가기준) AI 도입의 성과를 직접 대인시간과 서비스 품질, 안전으로 확인
- (정책 연결) 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일자리의 노동가치, 인구의 돌봄수요에 함께 대응

공간의 전환: 집적의 효율과 생활의 접근성을 결합

- 지역을 사업비의 배분단위가 아니라 성장과 삶이 함께 실현되는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인식



- (기능 분담) 모든 지역의 동일산업 유치보다 거점과 주변지역의 상호보완성을 강화
- (정책 목표) 인구와 시설 수뿐 아니라 성장역량과 실제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

지역투자: 기업유치에서 인재와 가족의 정착까지

- 투자 실행과 인재정착의 상호의존성을 전주기 지역투자 체계에 반영



- (투자 조건) 부지와 보조금뿐 아니라 전력과 인허가, 인력 및 연구협력을 조정
- (대학과 일자리) 연구중심대학과 거점 국립대 전략학과, 지역의 숙련수요와 채용을 연계
- (가족 단위 정착) 배우자 취업 지원과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착 경로를 함께 마련

공공서비스: 시설의 균등배치에서 이용가능성으로

- **인구감소 속에서도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공간과 재정을 함께 개편**
 - (압축과 연계)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교통과 이동, 디지털 및 방문서비스를 결합
 - (입지 조정) 시설 배치와 공동이용 정비
- **지역 간 협력의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고, 주민의 실제 이용성과를 확인**
 - 시설 감축 이후의 보완이 아니라 접근성을 포함한 공급모델을 처음부터 설계
 - 사업 집행과 시설투입보다 지역웰빙과 서비스의 품질, 권역 간 격차를 중시

세대의 전환: 인구감소 완화와 제도 적응을 병행

- 미래의 출생 회복만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인력의 활용과 국가시스템 개편을 병행

인구감소의 속도 완화

- 주거와 교육, 돌봄을 가족형성 지원으로 연계
- 일가정 양립과 경력유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여건을 함께 개선

감소하는 인구에 적응

- 임금체계와 계속고용, 국내외 인력의 숙련 활용을 함께 검토
-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변화에 맞추어 학교와 대학, 군 구조 개편

- (세대의 관점) 현재의 보장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대립시키지 않고 지속할 조건을 마련
- (정책 연결) 인구전략과 노동시장, 교육과 국방, 재정의 장기 제약을 함께 검토

노후보장: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을 역할 분담으로 조정

- 빈곤 완화와 소득대체, 자산의 현금흐름 전환을 제도별로 구분하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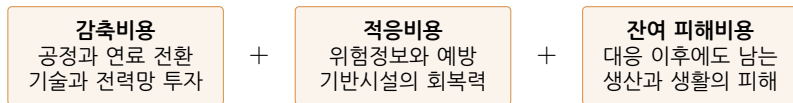
제도	주요 기능
기초연금	노인빈곤 완화
국민연금	기여에 기초한 소득보장
퇴직연금	적립자산의 노후소득화
주택연금	주택자산의 현금흐름화

- 의료와 돌봄은 장기 지출관리와 서비스 공급체계를 함께 정비

- 건강보험의 중장기 목표 기반 총량형 관리, 재택의료와 지역돌봄의 확충을 결합
- 재정안정성뿐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함께 검토

기후전환: 감축과 적응, 잔여피해를 함께 고려

- 장기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의 집중을 줄이는 이행경로를 설계



- (재정배분) 국가 피해비용과 부문별 감축 및 적응비용을 지속적으로 산정
- (투자 우선순위) 피해회피편익이 큰 적응과 비용효율적 감축, 전환비용을 낮추는 기반투자를 우선
- (부담의 분포) 산업과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비용을 함께 검토

탄소와 전력: 가격신호를 투자와 위험관리로 연결

- 보조금과 규제에 더해 가격기능으로 민간의 투자와 운영 선택을 유도

탄소시장

- 배출권 선물시장과 금융기관 참여로 가격발견과 위험관리 기능 강화
- 제거권의 별도 계정과 측정, 검증 및 등록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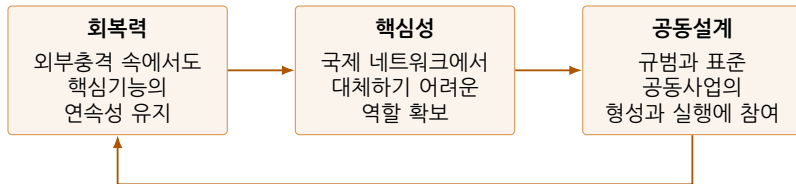
전력시장

- 시간과 입지, 유연성의 가치를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에 반영
- 장기계약과 분산자원 참여로 전력망, 저장 및 수요반응의 유인 정비

- (산업전환) 감축성과와 제품 탄소집약도에 연동한 지원, 표준과 인증 및 조달을 결합
- (생활기반) 가격신호의 역할과 취약계층의 주거 및 에너지효율 지원을 함께 검토

국가역할의 전환: 회복력과 핵심성, 공동설계

- 국내의 더 나은 삶과 국제사회의 더 나은 규칙을 양방향으로 연결



- (전략적 선택) 모든 질서를 주도하기보다 실력과 경험이 있는 분야에 집중
- (국내외 연계) 책임 있는 AI와 저탄소 제품, 공급망의 국내 경험을 국제협력으로 확장
- (상호보완성) 방어능력과 산업역량이 규칙 형성의 영향력으로 이어지도록 연결

대외전략: 핵심기능의 연속성과 국제적 연결을 강화

- **공급망의 사후대응을 넘어 실제 생산과 금융의 연속성을 관리**

- (공급망) 다층 조달망과 유연생산, 최소요구조업을 및 조기경보를 결합
- (금융) 외환과 자본시장 제도개선

- **국제협력의 수단을 금융과 규범, 평화공존의 제도까지 확장**

- (개발금융) 기술과 산업협력의 기반 확대
- (규범협력) 중견국 경제안보 대화와 AI, 공급망 및 저탄소 기준 논의 적극 참여
- (한반도) 안보와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적 조건 축적

- **국내에서 결정할 제도개편과 상대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할 과제를 구분**

재정은 모든 전환의 공통 기반

- 전환에 필요한 지출과 이를 지속할 재원을 함께 검토
 - (재정여력) 인구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기반, 의무지출 개편
 - (전달체계) 디지털 재정정보와 AI,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집행방식을 검토
 - (재정운용) 단순한 투입액보다 지출의 문제해결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운용
- 총지출과 국가채무의 경로는 제약으로, 정책의 문제해결 성과는 목적에 맞추어 평가

실행의 기준: 수단과 성과, 자원과 책임의 정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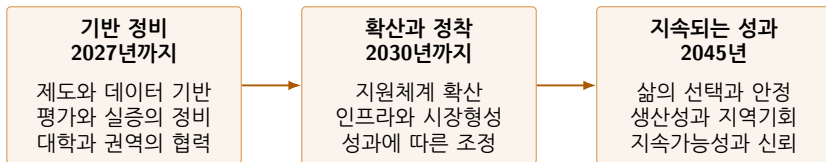
- 분야별 목적에 맞는 성과를 확인하고 제약과 부작용을 함께 평가

정책	투입과 집행의 확인	함께 확인할 실제 성과
연구개발	연구비와 과제완료	지식축적과 사업화, 프로그램 누적성과
전환훈련	훈련 이수와 지원인원	직무전환과 고용유지, 임금회복
지역투자	시설투자과 기업유치	인재정착과 서비스 접근성, 지역웰빙
기후전환	감축 및 적응 투자	감축성과와 피해회피, 비용과 회복력

- (상충관계) 보험가입 유인, 기업재편의 전환비용, 가격신호와 취약계층 부담을 함께 검토
- (정책학습) 분야별 비용과 성과를 자원배분 및 제도개선에 환류

2045까지: 제도 기반에서 확산, 지속되는 성과로

- 장기목표를 유지하되 분야별 성과와 제약에 따라 이행경로를 조정



- 성과가 확인된 제도는 확산하고 환경과 비용이 달라진 과제는 경로를 재검토

성장의 힘이 다음 선택의 기반으로 남는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성장의 힘을 삶의 행복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 **삶과 혁신:** 사람이 도전할 기반과 그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제도를 결합
- **공간과 세대:** 기회가 특정 지역과 현재세대에 한정되지 않도록 확산과 지속의 조건 마련
- **국가역할:** 국내의 성과를 지키면서 세계의 규칙과 해법을 함께 설계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와 변화에 참여할 조건을 함께 설계

감사합니다.